

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중*, 최영수**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복지경영 전공 박사과정*,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Income Expansion Plan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Income Security Policy

Nam-Jung Kim*, Young-Su Choi**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Sehan University*, Professor, Se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소득보장정책, 노후소득, 노인일자리, 소득확충방안, 기초연금

Abstract In order to enrich the lives of senior citizens,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ncrease income for the elderly by strengthening the current income security policies. Income security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It is a policy that guarantees income to maintain a certain standard of living when income is suspended due to unemployment, disease, or disaster, or when income is lost due to retirement or death of a dependent due to old age, or when expenditure accompanying birth, death, etc. occurs. According to the study, measures to expand old-age income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a phased increase in basic pension for the guarantee of old-age income is needed. Second, the income security fun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rd, a multi-layered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ush for the expansion of works for the elderly. In conclus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come security policy for the elderly, a reexamination of the current income guarantee system for the elderly is needed first. Then, it will be necessary to propose measures to gradually guarantee income for the elderly.

Key Words : Income Security Policy, Income for the Elderly, Work for the Elderly, Income Expansion Plan, Basic Pension

Received 14 June 2020, Revised 21 June 2020

Accepted 21 July 2020

Corresponding Author: Young-Su Choi
(Sehan University)

Email: shinan0803@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노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안정, 예를 들어 의료 지원 및 건강, 의식주 등 기초생활, 취미활동, 손자 용돈, 친교 활동 등과 건전한 사회활동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으로 이에 필요한 금전적 자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갖는 일의 의미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 참여욕구에 내재된 요소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년기의 경제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노화과정 속에서 노동력의 상실, 노동기회의 부족, 강제적인 퇴직 제도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는 노년기의 빈곤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사회적 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이란 노년기에 갖게 되는 노령,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써, 노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이해영, 2019: 127)[1].

노인의 적절한 경제적 수입은 최소한의 계속적 생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의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노인 가운데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수입이 절감되거나 단절되어 최소한의 경제적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에 대해 현대국가는 사회의 연대책임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재욱 외, 2018: 188)[2].

결론적으로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소득보장의 개념

2.1 개요

소득보장의 최저선은 무기여의 공공부조제도로 이루어지며, 보장수준은 최저생활비에 입각한 법적 규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국가책임이다. 최근 정부는 노인과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9년 5월 16일자)[3].

2.2 개요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2.2.1 노인빈곤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불충분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그동안 자녀양육과 결혼비용으로 본인의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며, 자녀들의 부양의식의 급격한 변화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이해영, 2019: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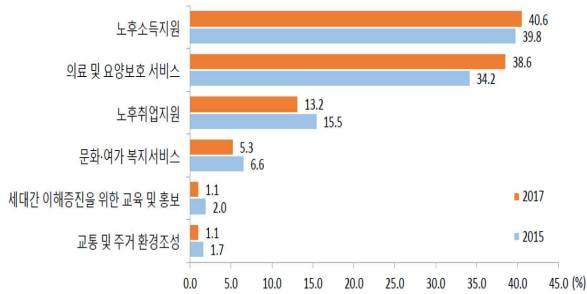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오늘날 노인들은 자신들의 실수, 나태, 도덕적 해이, 성격적 결함 등 개인적 책임요인이 없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다양하다. 즉, ①생물학적 노화, ②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③정년퇴직제도, ⑤소득 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 생활비의 본인 부담 과다 등이 있다(최성재·장인협, 2014: 350-351)[4].

2.3 노후소득에 대한 관심도

65세 이상 고령자는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로 ‘노후소득 지원’이 40.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38.6%)’, ‘노후취업 지원(13.2%)’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노후소득 지원’ 0.8%,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 4.4%가 증가한 반면, ‘노후취업 지원’ 2.3%, ‘문화·여가 복지 서비스’ 1.3%가 감소하였다. 남녀 모두 ‘노후소득 지원’,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순으

로 나타났으며, 고령일수록 ‘노후취업 지원’이나 ‘문화·여가 복지 서비스’는 감소하는 반면, ‘의료 및 요양보호 서비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조사를 분석해보면,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관심도는 53.8%로 나타나 노년기 소득보장정책이 절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노후를 위한 사회적 관심사

3. 소득보장제도

3.1 국민연금

3.1.1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제도(national pension system)는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정책이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정책이다(양승일, 2019: 151)[5]. 기본적으로, 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을 하게 되고,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되며,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금을 수급 받게 된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다(양승일, 2019: 152)[5].

그 후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보험원칙을 중시하는 제도에 내재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넓은 사각지대, 낮은 소득대체율 및 장기 재정 불안정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현 노인계층의 높은 빈곤율, 2015년 하반기에 실시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의 논란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사적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김상호 외, 2015: 발간사)[6].

결론적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3.1.2 국민연금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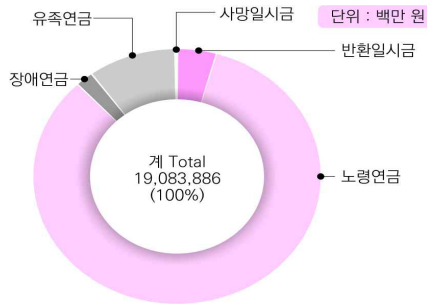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종란 외, 2020: 109-110).

- 첫째,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 둘째,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셋째,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수령한다.
- 넷째,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 다섯째, 물가 연동으로 그만큼 연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18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606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 전국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3.1.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상 「국민연금법」 제49조), 사망일시금이 있다.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18: 2)[8].

[그림 2] 국민연금 급여지급액 현황(2017)

급여의 종류에 따른 급여지급액을 살펴보면(국민연금관리공단, 2018: 8)[8], 노령연금이 83.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유족연금 9.82%, 반환일시금 4.41%, 장애연금 2.05%, 사망일시금은 0.23%의 순으로 점유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19.10월 기준, 당월, 단위:명)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계	4,823,288	3,978,064	71,020	774,204
1년 미만	397,904	306,828	2,814	88,262
1년~5년 미만	1,194,697	992,585	12,504	189,608
5년~10년 미만	1,102,457	906,754	11,348	184,355
10년~15년 미만	1,118,241	962,141	17,674	138,426
15년~20년 미만	838,125	709,764	17,442	110,919
20년 이상	171,864	99,992	9,238	62,634

3.1.4 국민연금 가입 유형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을 살펴보면(국민연금관리공단, 2018: 2)[8], 사업장가입자가 전체의 61.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가입자 35.24%, 임의계속가입자 1.58%, 임의가입자 1.50%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가 많은 임의가입자의 낮은 점유율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3.2 기초연금

3.2.1 기초연금의 개념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노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이다(오봉욱 외, 2019: 157)[9]. 국민연금의 최대 개선과제는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이다. 전 국민의 국민연금시대라고 하지만 2006년 기준 납부 예외자가 42%에 이르고, 미래의 전체 노인인구 57%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경로연금, 효도연금 등을 지급해 오고 공공부조 확대를 기해왔으나,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본격적인 해소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기초연금제도는 2007년 4월 제정 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기초연금은 도입과정에서 대상, 급여액,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많은 이해 갈등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연금안이 조정되어 2014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3.2.2 급여 대상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정부재정지출에 의해 지급되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다. 따라서,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연금은 사회보험방식의 기존 국민연금과 함께 노인소득 보장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궁극적으로 '1인 1연금' 형태로 미래의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3.2.3 급여체계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2020년 하위 40% 30만 원→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부부가구도 2018년 209만 6,000원에서 2019년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며, 가계 보증금은 재산으로 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4%)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3.3 퇴직금 및 퇴직연금, 개인연금

3.3.1 퇴직금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로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이다.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 공포)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

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한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퇴직금제도는 다른 제도에 앞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3.3.2 퇴직연금

우리 정부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직장이동성 증가, 중간정산제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되자, 1999년부터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이 통과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도 2010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적용되었다.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고,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형식으로 받아 자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종란 외, 2020: 119)[10].

첫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

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제도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선진국형 복지제도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존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명의로 가입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고 직장을 옮겨도 계속 연금을 이어 갈 수 있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이다. 특히, 이들 돈이 자본시장에 유입되므로 주식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기업으로서는 일시에 목돈이 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자금운용에 따른 손실 등 투자위험이 크다는 문제점도 있다. 보통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연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3.3.3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이나 기업의 퇴직금제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적 대비책의 필요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1993년 12월 25일 발표한 노후생활보장책으로서의 장기저축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 두 가지가 1994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탁형, 펀드형, 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종신행, 확정형, 상속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연금은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고, 낸 만큼 노후를 보장받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내가 준비한 만큼 노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노후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노후자금설계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4.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 방안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국내 노인들의 생활비는 본인 부담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노인소득보장정책은 이를 경감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했으나,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제고는 물론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적용 대상 확대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64세)의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을 지원했으나,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제고는 물론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 등 보험료 지원 신설 등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적용 대상 확대하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상담·연계, 중고령층 시장형 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형 일자리의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중고령층(60~64세)의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한 점진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이해영(2019). 『노인복지론』. 서울: 창지사.
- [2] 고재욱 외(2018).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양서원.
- [3] 머니투데이, 2019년 5월 16일자.
- [4] 최성재·장인협(2014). 『노인복지론』. 서울: 유헤출판사.
- [5] 양승일(2019).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경기: 양서원.
- [6] 김상호 외(2015).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20).
- [8] 국민연금관리공단(2018). 『2017년 국민연금통계연보』.
- [9] 오봉욱 외(2019).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 [10] 박종란(2019).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론』. 파주: 경기: 정민사.

김 남 중(Kim, Nam Jung)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세한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재 : 세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복지경영전공 박사과정
- 메트로신문 호남본부장
- 평통 전남청년위원장, 전남지역회의 간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복지관광
- E-Mail : 5555knj@hanmail.net

최 영 수(Choi, Young Soo)



- 세한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목포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현재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업경영, 관광복지, 관광경영
- E-Mail : shinan0803@hanmail.net